1. 총평

2017년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는 이해를 요하는 이론 문제가 12문제, 암기를 요하는 법령 문제가 8문제로서 법령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난이도를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할 경우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2문제(6번, 9번),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제(3번, 7번, 17번)이고 나머지 문제는 '중'이나 '중하'의 수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매우 우수, 80점부터 85점까지는 우수, 70점부터 75까지는 보통, 65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2	개념문제	1
정책학	4	이론문제	9
조직이론	4	법령문제	8
인사행정론	4	학자문제	-
재무행정론	4	사례문제	2
지방자치론	1		
행정환류론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총론보다는 정책, 조직, 인사, 재무행정론 등 각론의 출제 비중이 높다. 그러나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6월에 실시한 서울시 7급의 총론(기초이론) 부분에서 7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기본 개념 문제가 1문제, 이론문제가 9문제, 법령문제가 8문제로서 법령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사례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는데 기본 개념과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난이도를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상이나 중상으로 분류된 문제는 새롭게 출제되었거나 깊이 있게 출제된 문제들이다. 7번이나 9번 문제의 새롭게 출제된 문제이고, 3번, 6번, 17번 문제의 경우 조금 깊게 출제된 문제이다.

4번의 경우도 새롭게 출제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으로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으로 분류하였으며, 15번 문제도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되었으나 정답을 고르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중으로 분류하였다.

상	6, 9
중상	3, 7, 17
중	4, 5, 8, 10, 11, 14, 15, 18, 19, 20
중하	1, 2, 12, 13, 16

4, 당부 사항

1) 상당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새롭게 출제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출문제 수준을 넘어서 기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을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해설] ②(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구분>
⑴ 공기업(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시장성이 큼)

시장형 공기업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⑵ 준정부기관(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공공성이 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⑶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서, 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설치, 임원 임면, 경영실적 평가, 예산, 감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97-400.

2.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2017 국가직 7급

○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해설] ①(옳음) 문제의 설문은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 유형에 따른 집행 과정의 차이>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집행 과정이 달라진다.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갈수록 갈등의 정도는 높아져 정책집행이 어려워진다.

비교 기준 / 정책의 유형	주요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 간의 관계의 안정성	안정적인 루틴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의 가능성	집행에 대한 논쟁과 갈등의 정도	관료의 집행결정에 대한 반발의 정도	집행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정도	정부 활동의 감소를 위한 압력의 정도	성공적인 집행의 상대적 어려움
분배정책	높다.	높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경쟁적 규제정책	낮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높다.	어느 정도 높다.	보통이다.
보호적 규제정책	낮다.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높다.	보통이다.
재분배정책	높다.	낮다.	높다.	높다.	매우 높다.	높다.	높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216.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3. 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②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③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④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해설] ②(틀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에 구축하고,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②번 지문은 잘못이다.
①(옳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은 2013년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대상에 선정되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2007년 구축)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 등 정부의 재정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2007년 이전 재정정보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관리되어 통합된 재정정보의 제공이 어려웠으며, 재정제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시스템 기반이 필요하여 본 시스템을 출범하였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등 재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자금과 자산 · 부채를 상호 연계관리하고 국가재정의 재무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복식 부기 ·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반영하여 재정위험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하향식 예산(Top-down budget) 관리모형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거시예산(macro-budget)제도에 해당하며,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하고 각 부처의 예산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84, 626-628.

4. 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②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 · 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③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설] ④(틀림)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위협을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SWOT 분석(Harvard 모형)>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의 분석은 조직의 역량·능력문제에,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의 분석은 조직의 생존문제에 중점을 둔다.

구 분		조직의 역량	
		강점(S)	약점(W)
환 경	기회(O)	SO 전략 : 공격적 전략	WO 전략 : 방향 전환 전략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려는 전략
	위협(T)	ST 전략 : 다양화 전략	WT 전략 : 방어적 전략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42-443.

5.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②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③ 매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④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해설] ①(옳음)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②(틀림)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정치화, 즉 엽관주의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④(틀림) ③은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 ④는 매디슨주의(Madisonianism)에 대한 설명이다.
<미국 국부들의 정치사상 및 행정사상 비교>

구 분	해밀턴(Hamiltonian) 사상	제퍼슨(Jeffersonian) 사상	매디슨(Madisonian) 사상
기본적 관점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중앙집권적 연방주의, 능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지방분권 사상, 민주	이익집단 요구의 중립적 조정 및 균형을 중시하는 다원주의 사상(절충)
정부 역할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한 원동력 – 1930년대 뉴딜정책	대중농업공화국 – 1960년대 신행정론	도당의 인간적 측면의 효과(파벌의 해악)를 통제하기 위한 균형 메커니즘
기관적 강조점	연방집행부	풀뿌리 민주주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
행정재량권의 정도	넓은 전문적 재량 인정	기능적 전문성으로 엄격히 제한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상호 종속성
공직의 선호 유형	전문경력직으로서의 역할	민중들 간의 비공식적 협력	협상과 타협 중시
바람직한 행정가 스타일	실천자	공복(公僕)	협상과 타협의 예술적인 실천자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1-33.

6.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②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③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④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해설] ①(틀림) 미국에서 1993년 도입한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는 결과 지향적 예산을 위한 입법으로서, 통합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GPRA는 관리예산처(OMB)가 아닌 의회의 예산감시국(GAO)에서 추진한 법이다.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2002년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을 도입해 GPRA를 보완했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74-677.

7.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사회적 형상(Social Image) /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긍정적	부정적
높음	수혜집단 (Advantaged)	주장집단 (Contenders)
낮음	의존집단 (Dependents)	이탈집단 (Deviants)

※ 사회적 형상 :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이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 정치적 권력 :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가능한 보유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①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한다.
②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③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④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①(틀림)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유형화시킨 모형이다. 즉, 어떤 집단에 대한 인식, 이미지, 상징 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②(옳음)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모형에 따르면, 정책대상집단은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따.
③(틀림)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모형은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양하고, 정책대상집단의 인식, 이미지, 상징 등을 분석한다.
④(틀림)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모형은 정책설계가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모형>

		사회적 이미지(Social Image)	
		긍정적	부정적
정치적 권력 (Political Power)	강함	수혜집단(Advantaged) 노인, 기업, 퇴역군인, 과학자 등	주장집단(Contenders) 부유층, 거대노동조합, 소수집단, 문화 상류층
	약함	의존집단(Dependents) 아동, 부녀자, 장애인	이탈집단(Deviants) 범죄자, 약물중독자, 공산주의자, 국기 소각자, 깡패집단

[정답] ②

8. 「국가재정법」 상 특별화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아닌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군인연금특별회계법」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③(틀림)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기금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기금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 - 법률로 설치>
⑴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⑵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재정융자특별회계x - 2007년 폐지)
⑶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교통시설, 지역발전, 등기,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94-597.

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③ 로즈(Rose)의 '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④ 정책학습의 주제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해설] ②(틀림)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외생적 학습'은 정책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내생적 학습'은 정책의 환경 또는 정책의 수단들에 대한 학습을 의미한다.

<정책학습>
1. 개념 : 정책학습이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한 정책목표나 수단의 효과성과 적절성 또는 효율성 등과 관련된 경험이나 체계적 사고를 통하여 목표와 수단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체 :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3. 유형
⑴ Howlett & Ramesh의 분류 :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

	내생적 학습	외생적 학습
학습 주체	소규모적이며 기술적으로 전문화된 정책 네트워크(특정 정책 하위체계 내부에서 이루어짐)	대규모적이며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 커뮤니티(일반대중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짐)
학습 대상	정책의 환경(setting) 또는 정책의 수단	문제에 대한 인지, 정책목적과 아이디어
유사 개념	수단적 학습	사회적 학습

⑵ 교훈얻기와 사회적 학습
① 교훈얻기 학습 :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행위지향적인 결론이다. 교훈얻기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 · 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② 사회적 학습 : 사회적 학습은 가장 근본적인 유형의 학습으로, 이 학습은 정책의 밑면에 깔려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학습은 정책과정의 밖에서 기원하며, 정책결정자가 사회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학습은 외생적 학습에 해당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297.

10.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①(옳음) Lewis의 이론(합리주의, 총체주의)은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한계효용), 상대적 효과성 개념을 이용하여 예산 결정을 분석하였다.

⑴ 상대적 가치 : 예산결정은 상대적 가치(relative merits)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예산분석의 기본 목표는 자금의 대체적인 용도에서 얻을 결과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비용'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⑵ 증분분석(한계효용) : 한계효용체감의 현상 때문에 증분분석(incremental analysis)이 필요하다. 즉, 추가적 지출로부터 생기는 추가적 가치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계효용 개념을 활용한 증분분석은 상이한 목적 간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⑶ 상대적 효과성 : 공통의 목표 달성 문제를 다룰 때에는 상대적 효과성(relative effecti- veness)에 의해서 상대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②(틀림)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부처 관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틀림)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중앙예산기관의 예산분석가들이 예산결정을 할 때 복수의 합리성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④(틀림)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사후적인 분석으로 적절하지만, 단절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접근법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15-617.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단체교섭 대상은? 2017 국가직 7급

①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해설] ②(옳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 정부교섭대표(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52-554.

12.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②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③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해설] ③(옳음) Maslow는 하위 욕구가 부분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상위 욕구가 발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①(틀림)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에서 가장 낮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②(틀림)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이다. 사회적 욕구는 관계 욕구에 해당한다.
④(틀림) 사회적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 욕구나 애정적 욕구를 의미한다.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하는 것은 자기실현 욕구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09-410.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②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③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④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정도를 말한다.

[해설] ④(옳음) 조직의 복잡성은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산을 의미한다.
①(틀림)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은 감소한다.
②(틀림)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구조를 갖는다.
③(틀림)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분권화를 촉진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67-372.

14. 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 2017 국가직 7급

> 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 ~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 · 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 · 일반음식점 규제 · 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 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① 고객정치 ② 대중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기업가정치

[해설] ④(옳음) 문제의 설문은 환경규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적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좁게 집중	기업가적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5-77.

15.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③(옳음)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으로서,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①(틀림) ①은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②(틀림) 국고보조금의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여권발급은 100%, 119구조장비 확충은 50%,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은 30%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틀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804-805.

16.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2017 국가직 7급

① 목표 대치(displacement)
② 목표 확대(expansion)
③ 목표 추가(multiplication)
④ 목표 승계(succession)

[해설] ①(옳음) 문제의 설문은 목표 대치에 대한 설명이다.
<목표의 대치(전환, displacement)>
종국적 가치(1차적 목표)가 수단적 가치(2차적 목표)로 대치되는 것을 말한다.
① R. Merton의 동조과잉(overconformity) : 법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② A. Etzioni의 목표의 과다측정(overmeasurement) : 조직이 본질적 목표인 무형적(추상적) 목표를 망각하고 수단적 목표인 유형적(수치적) 목표에 집착하는 것
③ C. Wolf의 내부성(internalities) :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전체 목표를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할거주의)
④ R.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한 정당이나 단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수 간부들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는 현상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246.

17.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설] ①(틀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따라서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②(틀림)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을 담당한다.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소청심사의 대상>
⑴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⑵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⑶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⑴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 변상명령)
⑵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⑶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⑷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⑸ 승진 탈락, 근무성적평정결과 등

③(틀림)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옳음)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 ·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한편,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73, 770.

18.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③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해설] ③(옳음)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면평가제도는 1999년 임의규정으로 도입된 후 2003년에 강행규정으로 전환되었다가 2008년 다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틀림)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틀림)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성과계약 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④(틀림) 역량평가제도는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위공무원의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용 전에 실시한다. 한편 2015년부터는 과장급 직위도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과장급 직위의 역량평가 의무화).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28-529, 494.

1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②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③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공모 직위 20%, 기관자율 직위 50%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 ①(옳음)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등)의 군을 말한다(정무직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본부장, 단장, 부장, 팀장, 심의관 등)
㉡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도의 행정부지사, 광역시의 행정부시장, 교육청의 부교육감,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 등)z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②(틀림) 고위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 시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있다.
③(틀림) 고위공무원단의 직무 등급은 2009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틀림)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20%, 공모 직위 30%, 기관자율 직위 50%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92-495.

2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7급

①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하였다.
③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④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해설] ④(틀림) ④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ePS :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G2B, 나라장터)이 구축되었다. G2B 시스템은 구매요청, 입찰, 계약, 검수, 대금지급 등의 조달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화하고, 조달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한 시스템이다. 한편, 온-나라시스템(On-Nara BPS System)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이다. 즉, 온-나라시스템은 대민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부 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G2G(Government to Government)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848, 860,